
「2021-제1호(Vol. 9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1. 31.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NABO 경제 · 산업동향 & 이슈(2020년 4분기)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강원도의 대응 •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강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재정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동향 & 이슈(2020년 4분기) •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예산 · 재정 관련법령 (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4. 정책 및 연구 (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남북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와 향후 과제 •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방향 •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예산 · 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2021.1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 • 행안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지역사랑상품권 13.3조원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었다 •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 • 지역경제 · 관광 활성화...동 · 남해안 명품 관광거점 조성 • 2050 탄소 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1. 경제

출처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2020년 4분기)

* NABO(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경제·산업동향)
 - 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부진이 서비스업에서 지속되고 고용상황 악화
 - ②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 둔화 및 낮은 서비스물가 수준이 유지되며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③ 12월 금융시장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을 배경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지속
- (경제·산업현안)
 - ① (2021년 국내·외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IMF, OECD 및 World Bank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회복대책과 소비회복에 힘입어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0~5.2%로 전망, 적극적 경제운용, 내수회복, 투자·수출 개선 및 민생안정 등을 선제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②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 2020.1.31. 영국의 EU 탈퇴 이후 전환기간 동안 EU와 유럽은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표적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증대됨. 그러나, 2020.12.24. EU와 영국은 핵심쟁점들에 대해 상호 양보하며 미래관계 협상에 합의하며 「EU-영국간 통상 및 협력협정」을 발표함.
 - ③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2020.3월말 가구의 자산은 4억 4,543만원, 부채는 8,256만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3.1%, 4.4% 증가하여,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다소 악화됨.
 - ④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동향 및 시사점)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여 2026년에는 5,050억 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접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수요 전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확보 전략의 다양화가 필요함.
- (경제·산업이슈)
 - ①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1. 경제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2021년 한국 경제 트렌드의 10대 키워드: WITH CORONA)

구 분		세부 내용
W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I	Improvement(개선)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T	Turnaround(선회)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H	Herd immunity(집단 면역)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C	Carbon neutral(탄소 중립)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O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자산 인플레이와 부채 버블
R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O	Ontact(온택트)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N	New deal(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A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상은?

- (주요내용)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국내에서도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과 대응방안)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될 것임.

2021년경제키워드	대응 방안
With coronavirus	민간의 경제 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Improvement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외연 확장 및 글로벌 동상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
Turnaround	공공 일자리 정책의 타게팅 집중과 민간의 일자리 감소 방지에 주력
Herd immunity	방역 우선 속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필요
Carbon neutral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합리적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Overliquidity	금융·통화 당국의 과도한 자산 인플레이 발생과 부채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비
R&D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명확한 지향점 확립과 선진적 국가 연구 생태계 구축
Ontact	국내 역량과 국제 비교우위를 고려한 핵심 신기술·신산업 집중 육성
New deal	한국판 뉴딜의 정책 지속성 확보와 수요자 관점 접근 요구
After the pandemic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강원도의 대응

강원연구원

- (2021년 경제전망)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 및 접종 속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 기반 위에서 경제 반등의 전기 마련에 주력하면서 성장경로 회복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내용)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정책목표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방향 주요내용)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① 소비 진작과 소비여건 개선, ② 국내 관광 회복을 통한 내수활력 제고, ③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④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 지원과 자생력 확충 등 지역 기저계층 보호 강화, 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⑥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한 수소 생태계 구축과 BIG3 성장동력화 지원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역의 성장기반 강화, ⑦ 인재육성 등 사람투자와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등이 있음.
- (강원도의 대응방향)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유지로 경기회복과 정상 성장경로의 복귀 도모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과 탄소중립 ‘그린경제’로의 구조개편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로 장기 지역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바로가기](#)

■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개요 및 배경) 2020년 12월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2021년의 경제 운영 핵심 목표로 △‘쌍순환’ 신발전 구도 구축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의 동적 균형 △개혁·혁신 등이 제시됨.
- (2021년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
 - ① 중국은 2021년 거시정책 운영 방향으로 연속성(连续性)·안정성(穩定性)·지속가능성(可持續性) 유지의 원칙 아래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함.
 - ② 2021년 중국경제 운영의 8대 중점 업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부 불확실성 대응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부 성장동력 확보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정함.
- (평가 및 시사점) 중국은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정비 △기술혁신 성장 △녹색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대응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NABO 재정동향 & 이슈(2020년 4분기)

- (주요 재정지표) 2020년 10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87.0%, 84.5%이며, 통합재정수지(59.0조원 적자)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7.6조원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812.9조원)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110.1조원)등의 이유로 전년 결산 대비 113.9조원 증가함.
- (주요 재정동향) 2020년 4분기 주요 재정동향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①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확정,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발표,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첨단·연구분야 국내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발표, ② 코로나19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발표, ③ 2021년도 4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④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⑥ 대체복무제도 시행, ⑦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⑧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⑨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⑩ 일본,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⑪ 2020 미국 대선후보 간 경제·재정정책 공약 비교 등 10가지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함.
- (주요 재정이슈) 2020년 4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 (개관) 국회는 2020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20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정세법 주요내용 및 심사 쟁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사항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개정사항 등이 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등의 심사 쟁점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반영된 안건은 총 35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안건은 총 16건,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11월까지 제안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은 375건으로 이 중 128건을 처리함.
- (향후 논의과제) 2020년 세법개정안 심사는 마무리되었으나, 금융세계 개편에 따른 향후 보완책 마련,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전자담배 세율조정안 마련,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가 상존함.

[바로가기](#)

■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 (검토배경)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21.1.20.)하면서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 (바이든 재정정책 개관)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 재정정책 특징)
 - ①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경기부양]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예고
 - ②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 구축
 - ③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신정부의 재정책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
- (재정정책의 파급영향 평가)
 - ① (2021년 경제성장)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제5차, 9,000억달러 규모)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② (2022~24년 경제성장) Blue Wave 실현으로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전망
 - ③ [재정건전성]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FT)
- (종합평가 및 시사점)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책대로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금년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개정 '20.12.29. 시행 '21.1.1.)

법제처

- 법인이 분할·분할합병 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범위 조정,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 지급 관련 납세의무 승계, 지방세 납부지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6cc62f861fdd6e50510c0224a756dff_img.jpg\)바로가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개정 '20.12.29. 시행 '21.1.1.)

법제처

- 신종 담배 출시 관련 담배소비세 부과대상 추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f95dab70c751fda7d824b8b03650f7aa_img.jpg\)바로가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개정 '20.12.29. 시행 '21.1.1.)

법제처

- 「지방세기본법」 개정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에 맞추어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통합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9474ce1d70442456f8fe9c393ea149c_img.jpg\)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개정·시행 '21.1.7.)

법제처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 누적손익을 순자산 증감이 아닌 기초순자산으로 표기,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db214d549b9aeebe72aa11d3a5c4b1a_img.jpg\)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개정 '21.1.5. 시행 '21.4.6.)

법제처

-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a05a1b59a958625e01d770867ed2a42e_img.jpg\)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 '21.1.12. 시행 '21.7.13.)

법제처

-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 '21.1.5. 시행 '22.1.1.)

법제처

-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산·집중되고 있는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임.

[바로가기](#)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통과 '21.1.26.)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됨.
- 이에 동 종합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1.26. 국무회의를 통과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 개요)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여건 변화, 산업별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수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및 분석지표)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표 2개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표 3개를 선정하여 분석
 - ① 양적 측면의 수출경쟁력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절대적인 크기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무역특화지수와 수출시장점유율로 평가
 - ② 수출경쟁력의 질적 수준은 수출입 단가로 산정하는 고부가가치화지수, 수출입 단가비율과 기술수출액과 기술도입액의 차이인 기술무역수지로 평가
- (주요 주력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주력산업 중 반도체, 조선, 철강 산업의 양적·질적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원천기술의 부족 등으로 고부가가치화 수준 등 질적 경쟁력이 담보 또는 악화 추세임.
- (주요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주요 신산업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신소재 산업 등으로, 이 중 이차전지는 최근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양적·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바이오헬스는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지만 고부가가치화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이므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와 신성장동력인 신산업의 육성 필요 → 학계와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R&D 촉진 정책 및 연구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논의배경)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IT 기업은 시장 소재지국에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활동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 국제조세기준으로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소재지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하에서 적용할 새로운 조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각국의 주요과제로 부상하였고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됨.
- (논의동향)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통해 ①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②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두 가지 접근법(Two Pillar Approach)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중반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대응방안)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남북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남북관계가 침체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본 보고서는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해야할 과제와 역할을 분석함.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 평가) 남북관계가 순항했던 2000년~2007년까지는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로 2010년~2011년의 실적은 저조하였으며, 정체시기인 2020년의 실적도 저조한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주요논의)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24건,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7개월 만에 10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기금용도 확장 및 세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4건으로 관심이 높은 쟁점으로 나타난.
 - ※ 남북관계 촉진 기금역할에 초점을 둔 논의(제안)사항: 보건의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사업 추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의 기금 지출 방안, 기금용도에 교류협력 사전준비 사업 추가
- (국회의 역할) 향후 입법과정상 가장 중요한 국회의 역할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범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나가며) 코로나19, 북미-남북관계 등이 정체되어 있는 현 시점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개정안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남북관계 발전방안 뿐만 아니라, 그간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과 그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를 상쇄시켜 총수요안정에 기여함.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지급현황 및 지표변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지표의 변화는 전문 참조

구분	지원범위	지원수준	소요재원
제1차 재난지원금(20.5월)	전 국민(2,171만 가구)	가구원수별 40~100만원	14.3조원
제2차 재난지원금(20.9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선별	가구당 40~100만원 1인당 2~200만원	7.8조원
제3차 재난지원금(21.1월이후)	코로나3차 확산피해 업종계층	2차와 유사 수준	3.5조원+α

- (미국의 지급현황과 경제적효과 분석) 미국의 경우, 총수요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direct payments to Americans)과 추가실업수당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의 연장을 결정함.
 - * 미의회는 '20.12.21. 9천억 달러 규모의 제5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킴
- (향후 과제) 소비부진과 같은 총수요 충격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및 일일 노동자들과 같은 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위기와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방향

- (코로나19의 지역사회경제 영향)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충격은 대면 접촉이 잦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고, 지역경기 동향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가 심화되고, 숙박·음식·스포츠·여가·교육 등 대면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이는 지역경기침체로 이어짐. 지역별 GRDP 전망은 대구 지역의 GRDP 성장률(중립 : -0.83%, 부정 : -1.56%)이 가장 낮으며, 특별·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의 성장률 둔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응 진단)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방역 및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민생·금융안정, 고용안정 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4차례 추경을 포함 310조원 규모(GDP의 16%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침체극복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 완화,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심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 지자체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지역 주민의 구성과 사안별 시급성도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종합적 판단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적으로는 한국형 뉴딜에서 제시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과 미래산업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와 채무의 증가로 인한 부채압박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바로가기](#)

■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 (아동수당 정책과 아동돌봄포인트 추가 지급) 2018.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현재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소득보조 정책의 일환으로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 지급함.
- (소비진작 효과의 정의와 식별) 소비 진작 효과란 지급된 아동돌봄포인트가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은 가정의 상황’보다 지출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의미함. 따라서, 소득 및 인구구성 등 지역별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 후, 아동돌봄포인트 지원액에 비례하여 지출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역 간에 비교한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금에 대한 소비 증가분, 즉 소비 진작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소비진작 효과의 추정결과와 시사점)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진작 효과를 추정한 결과,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지급 이후 4주 무렵부터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로 장기간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이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전방위적인 지원은 피해가 없는 가구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향후 전체 가계의 소득 파악, 적정 지원기준 설정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문제의 제기)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가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인해 새로운 GVC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 GVC 변화요인)
 - ① 중국무역의 정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무역축소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② 5G·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은 무역축소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특히 중국 수출입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산업에서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③ 2018년 말에 발효된 CPTPP의 누적원산지 제도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 변화요인으로 작용함
 -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한국의 정책대응)
 - ①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수록 누적원산지 비적용이 야기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특히 중간재의 수출 감소가 점차 확대될 것임
 - ② FDI 유치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FDI 관리체계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FDI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결론) CP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제적 측면의 통상정책의 목표인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음.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부작용은 통상정책이 아닌 복지정책(무역조정제도의 중심을 기업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농가소득 보전)으로 대응하여야 함.

[바로가기](#)

■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GVC 전망) 코로나19 사태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주요 산업의 공급차질과 수요 절벽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이 대폭 위축됨과 동시에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한국의 GVC 구조 분석) 한국의 산업별 대외경쟁력 변화 분석 결과,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심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가 뚜렷함.
- (GVC 재편 방향) GVC를 활용한 생산구조의 축소와 수요지역에 근접한 생산기반 구축, 공급체인 단위의 다양화, 디지털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① 주요국의 산업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미래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주로 ICT 산업, 바이오 및 의료, 친환경 에너지 등이 선정됨
 - ② 신흥국의 산업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과 동시에 현재 자국 주력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됨
- (결론) 개별 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산업별 경쟁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 정부는 '20.12.17.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함.
- 20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로 우리 정부도 ①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체질개선 및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노력을 병행함.
- 2021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 우려되며,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가 필요함.

[바로가기](#)

■ 2021.1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기획재정부

- 국제통화기금은 '21.1.26.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 바,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20.10월比+0.3%p)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의 경우 4.3%('20.10월比+0.4%p), 신흥·개도국은 6.3%(+0.3%p)로 상향 조정함.
- 한국의 경우 '20년 $\Delta 1.1%$ ('20.10월比 +0.8%p), '21년 3.1%('20.10월比 +0.2%p)로 모두 상향 조정
 - ※ '20년 한국 성장률($\Delta 1.1%$)은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 ※ '20~'21년 합산성장률(2.0%)도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바로가기](#)

■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

행정안전부

- 정부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5일 17개 시·도와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함.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됨.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전략적 재정 운용과 함께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을 확대할 계획임.
-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을 지역균형 뉴딜 성장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20.12.~, 약 35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행안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12.16. 주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선정·발표함.
-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4년째를 맞이하였으며, 2020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84개 자치단체에서 105건의 사례가 제출되어 총 22개 자치단체가 우수 단체로 선정됨.
- 선정 결과, 종합상은 대구시 등 14개 기관, 특별상은 전북 완주군 등 8개 기관이 수상하였으며, 특별상의 경우 청소년 및 청년참여-주민교육-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선정함.

【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사례(최우수 8개 기관) 】

구분	기관명	우수사례
종합상 (최우수)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민 1% 참여, 온라인 총회 도입
	경기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실시
	충남 서천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깔끔美방” 설치
	서울 은평구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숙의단 운영
특별상 (최우수)	전북 완주군	청소년 등 맞춤형 눈높이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사업탄탄 워크숍 운영
	인천 부평구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계층별 예산학교 운영
	경기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년 SNS 서포터즈 홍보단 운영
	대구 서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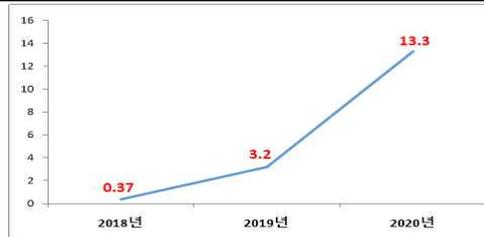
■ 지역사랑상품권 13.3조원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1.1.14.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3조 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35.9배, 2019년 대비 4.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힘.
- 행안부가 국비를 지원한 9.6조 원 중 9.2조 원이 판매됐으며,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4.1조 원 규모로,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2018~2020) 】

구분	'18년	'19년	'20년
총 판매액 (A=B+C)	0.37조	3.2조	13.3조
국비 지원규모 중 판매액(B)	0.1조	2.3조	9.2조
지자체 자체발행 판매액(C)	0.27조	0.9조	4.1조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규모를 총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설 명절 전까지 2.7조 원을 판매하고 1/4분기인 3월까지 4.5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는 1.11.~25.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 6,574억원을 지급(26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합계
확대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1만명	81.3만명	197.2만명	291.5만명
인원	11.9만명	76.7만명	176.5만명	265.1만명
금액	3,581억원	1조 5,346억원	1조 7,648억원	3조 6,574억원

- 버팀목자금을 지급한 1. 11. 이후 15일 만에 확대된 1차 신속지급 대상 291만 5천명 중 90.9%에게 지원한 셈으로,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 27.부터 2.5까지 미신청자 26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임.

[바로가기](#)

■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동·남해안 명품 관광거점 조성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1.1.12. 2021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 원 규모의 4개 신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18.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3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재정비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착수 사업에 '20.6월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 중 3곳이 반영됐고 동해안권에서 1곳이 포함됨.
- 2021년 착수 주요 신규사업은 ①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②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③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④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등임.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태백시와 정선시의 6개 역사를 중심으로 총 193억원을 투입, 폐광지역 이미지를 문화관광 중심으로 쇄신하기 위한 사업

[바로가기](#)

■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1.1.21.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함.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하여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탄소중립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임.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정책금융 선도적 지원	민간자금 유입 유도	시장인프라 정비
↓	↓	↓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세부과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시행 등)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등)

[바로가기](#)